

# AX시대 소비자정책 동향 및 시사점

## - 새 정부 국정계획을 중심으로 -

### 목 차

1. 서론	/ 01
2. 새 정부 국정계획의 AI 관련 정책 기초	/ 07
3. 소비자정책 영역별 AI 관련 국정과제	/ 12
4. 결론 및 시사점	/ 19

# 1. 서론

## 1.1.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고도화로 국가 전반에서 AI 기반 대전환이 추진되는 AX(AI Transformation)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AX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인공지능 활용을 넘어 산업·공공·사회 전반에서 AI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을 의미하며<sup>1)</sup>,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의 다음 단계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AX시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 국민이 AI 혜택을 향유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과제(국정23)로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전략으로 발표함<sup>2)</sup>

- AI 기본사회는 국민 보편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을 통해 추진하며  
①AI기반 지역 의료 격차해소, ②생애주기 전 과정 전 국민 AI 활용을 위한 교육, ③금융보호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전 국민 AI 혜택 향유를 목표로 함<sup>3)</sup>

○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25.9.),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12.30.).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주도할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발표합니다.

2) 국정기획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025.9.).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구축하며<sup>4)</sup> AI를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위치시키고 있음

- AX시대 진입과 정부의 AI 기본사회 추진은 소비환경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온라인 쇼핑, 금융, 의료, 모빌리티, 주거·가정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AI 추천, 신용평가, 진단보조, 자율주행, 스마트홈 서비스 등 AI 기반 제품·서비스가 확산되며 소비환경이 점차 AI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AI 기반 제품·서비스는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과 개인화된 추천·보조 기능을 통해 소비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반적인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고 있음
  - 반면, 인공지능의 오류·편향 및 투명성 부족은 정보 혼란과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침해와 책임소재 불분명 등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AI 이해도와 활용 역량에 따른 소비자 간 격차 확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AI 관련 국정계획이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향후 5년간 국가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최상위 로드맵으로서 AI 관련 정책의 범위와 기초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9.8.).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 국정과제는 부처별 정책을 상위 수준에서 통합·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만큼 AX시대 소비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정계획 내 AI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체계적 검토가 요구됨
  
- 이에 본 고는 AX시대 새 정부 국정계획에 포함된 AI 관련 정책 과제를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본사회 구현 과정에서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2. 검토 대상 및 방법

- **(검토 대상 및 범위)** 본 고는 새 정부가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기 주요 소비자정책 동향을 검토하기 위해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등을 검토 대상으로 설정함
  - 국정계획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방향의 경우 17개 광역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가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정책 관점에서의 검토 범위에서는 제외함
  
- **(검토 방법)** AX시대 정부의 AI 정책 기초와 소비자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3단계 절차를 수행함(〈그림 1〉 참조)
  - **(1단계)** 국정계획 내 AI 관련 정책과제 1차 선별

- 123대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명, 과제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전면 검토하여 'AI', 'AX', '인공지능' 등 AI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는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별함
- 기술, 인프라, 서비스, 법제, 교육 등 AI 적용 전 영역과 AI 분야 재정지원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계획 전반의 AI 정책 기초를 파악함

〈그림 1〉 검토 대상 및 방법

단계	분석 대상	분석 내용
[1단계] AI 정책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대 국정과제</li> <li>• 재정지원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관련 키워드 기반 1차 선별</li> <li>• 새 정부 국정계획 내 AI 관련 정책과제 추출 및 정책 기초 파악</li> </ul>
[2단계] 대국민 AI 정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대 국정과제 중 선별된 AI 관련 정책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대상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li> </ul> </li> <li>• 선별된 AI 관련 정책과제 중 대국민(소비자) 정책과제 추출</li> </ul>
[3단계] 소비자정책 영역별 AI 정책 마련 현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대 국정과제 중 AI 관련 대국민(소비자) 정책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정책 영역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거래/정보·역량/피해구제</li> </ul> </li> <li>• 새 정부 국정계획 내 소비자정책 영역별 AI 관련 정책 현황 검토</li> </ul>

○ (2단계) AI 관련 국정과제의 정책대상 분류

- 1단계에서 선별된 AI 관련 국정과제를 정책이 작용하는 주요 대상별로 분류함
-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대상을 전제로 설계되며<sup>5)</sup>, 이러한 정책대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을 받거나 정책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태상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집단·공동체로 이해됨<sup>6)</sup>

5) Schneider, A., & Ingram, H.(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고에서는 AI 관련 국정과제가 작용하는 주요 대상을 기준으로 대국민, 대정부, 대시장 등 정책대상별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대국민 정책과제를 선별하였음
- **(대국민 정책)** 국민(소비자)의 안전, 권익, 정보 접근성, 서비스 이용 환경, 디지털 역량 등과 연계된 민간·소비자 부문의 정책
- **(대시장 정책)** 기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및 규제 기반 마련 등 시장·공급 부문의 정책
- **(대정부 정책)** 공공분야 업무 혁신, 공공데이터 관리, 행정 효율화,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공공부문 중심의 관련 정책

○ **(3단계)** AI 관련 대국민 국정과제의 소비자정책 영역 분류

- 2단계에서 도출된 국민(소비자) 대상 AI 국정과제를 4대 소비자정책 영역(안전·거래·정보(역량)·피해구제)에 따라 재분류함
-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모든 종류의 규제를 통칭하며 소비자문제는 전통적으로 안전, 거래, 정보(역량)의 세 가지 영역에서 발생함<sup>7)</sup>
- **(소비자안전 관련 정책)** 제품, 서비스,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관련 정책을 의미
- **(소비자거래 관련 정책)** 시장의 불완전경쟁, 사업자-소비자 간 지위 비대칭, 신기술 기반 새로운 거래 수단 등장 등으로 발생하는 거래상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6) Quade, E. S.(1982). Analysis for Public Decision 2nd ed. New York: Elsevier.; 김택형, 박형준 (2015). 한국 관료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165-187.

7) 여정성, 신세라, 사지연(2020). 소비자정책: 이론과 정책설계. 서울: 교문사.

- **(소비자정보·역량 관련 정책)** 정보 부족, 허위·과장·기만 정보로 인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 표시광고 규제, 소비자교육 및 역량강화 정책
  -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정책)** 상기 세 영역에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피해구제 등 사후적 구제정책
- 본 고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정책 분류 기준에 따라 AI 관련 대국민 국정과제를 네 가지 소비자정책 영역으로 재분류하고, 영역별 정책 분포 및 내용 특성을 분석하여 소비자권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검토함

## 2. 새 정부 국정계획의 AI 관련 정책 기초

- (AI시대 개막과 국가 전략) 새 정부는 국정계획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 범용 기술로 설명하고 있음
  - 국정목표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AI·디지털 안전·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국정23)
  - 이는 AI가 국민 소비자의 삶, 안전, 소비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정책 대응 의지를 반영함
- (재정지원) AI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기반 구축에 정책적 자원과 재정이 집중 투입될 계획임
  - AI 등 첨단 미래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추진되며(국정46), 이 중 AI 분야에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임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제 지원에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세액공제 강화가 포함됨
  -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활용하게 될 AI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결정하는 근간이 됨

- **(AI 관련 국정과제 검토)** 123대 국정과제 중 약 40%에 해당하는 49개 과제에 AI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 정부 국정운영 전반이 AI 기반 전환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음이 확인됨
- **(AI 국정과제 수)** AI 관련 키워드(AI, AX, 인공지능 등)를 포함하는 국정과제는 총 49개로, 개별 산업이나 기술 분야를 넘어 디지털 행정, 복지, 안전, 교육 혁신, 환경·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 이는 AI가 특정 산업이나 기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민간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정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소비자 안전, 거래, 정보 접근성 등 소비생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며 AX시대에 부합하는 소비자정책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함
- **(부처별 분포)**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가 6개로 가장 많은 AI 관련 국정과제를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AI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는 과기정통부(6개), 국조실·농식품부·복지부·산업부·중기부·행안부·기후부(각 3개), 국방부·국토부·금융위·문체부·법무부(각 2개), 감사원·개인정보위·경찰청·노동부·교육부·권익위·재경부·방사청·방미통위·성평등부·외교부·인사처·해수부·행복청(각 1개) 등 총 27개 부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 이는 AI 관련 정책이 특정 부처나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AI 활용이 산업·사회·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다수의 부처가 AI를 활용한 정책 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소비환경과 접점이 되는 정책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소비자관점의 통합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

**〈표 1〉 새 정부 국정계획 내 부처별 AI 관련 국정과제**

연번	주관부처	AI 관련 국정과제수*	국정과제 번호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1	과기정통부	6개	20, 21, 22, 23, 2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AI 고속도로) 구축, AI 모델 및 초격차 기술 확보, AI 기본사회(안전 및 신뢰) 실현, AI 인재 양성 등 국가 AI 전략의 핵심 주체임</li> </ul>
2	국조실	3개	19, 36,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전 국민 규제 정보 서비스, 신산업 규제 제로 구역 설정, AI 기반 직업훈련 확산 등 범부처 차원의 규제 합리화 및 청년 지원 정책을 조율함</li> </ul>
3	농식품부	3개	68, 69,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스마트 농업고도화, AI 기반 재해 위험지도 및 조기경보 시스템구축,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 농업혁신 및 농어촌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함</li> </ul>
4	복지부	3개	32, 77,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AI 기반 위기 가구 발굴, AI·IoT 기반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충 등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의 AI 전환을 담당함</li> </ul>
5	산업부	3개	29, 30,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팩토리 등 신성장동력 발굴, AI 기반 전력망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조업 혁신 및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를 추진함</li> </ul>
6	중기부	3개	34, 35,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상공인 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중소·소상공인 지원 및 혁신을 담당함</li> </ul>
7	행안부	3개	24, 72,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통한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AI 기반 재난 모니터링,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 공공시스템 혁신 및 재난안전 관리를 주도함</li> </ul>
8	기후부	3개	43, 44,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감염병 감시, AI 기반 식중독 예측 시스템(생활환경안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AI 도입(투명성 강화) 등 환경 및 보건 안전 분야에 AI를 활용함</li> </ul>
9	국방부	2개	109,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장·작전·병력관리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방 운용체계를 고도화하고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군체계 구축 등 국방 개혁을 추진함</li> </ul>

연번	주관부처	AI 관련 국정과제수*	국정과제 번호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10	국토부	2개	31, 50	• AI 기반 도시서비스 실증·확산, AI·모빌리티 혁신 허브 조성 등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함
11	금융위	2개	46, 47	•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AI 전략산업 투자 등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AI 분야 금융 지원을 담당함
12	문체부	2개	103, 107	• AI 기반 제작 지원·데이터 구축·저작권 보호 시스템 고도화 및 AI 기반 관광 서비스 혁신 등 문화·관광 산업의 AI 전환을 주도함
13	법무부	2개	6, 74	•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치안 AI 도입 및 신종범죄(딥페이크) 대응 강화 등 법률 및 치안 시스템의 AI 전환을 추진함
14	기타 14개 부처	각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처별 국정과제 번호)</b> 감사원(5), 개인정보위(25), 경찰청(74), 노동부(92), 교육부(99), 권익위(16), 재경부(33), 방사청(113), 방미통위(108), 성평등부(98), 외교부(121), 인사처(13), 해수부(76), 행복청(50)</li> <li>• <b>(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b>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위), AI 기반 직업훈련(노동부), AI 교육 생태계 구축(교육부), AI 기반 콘텐츠 관리 체계(방미통위) 등 각 부처의 핵심 기능에 AI를 적용함</li> </ul>

\* AI 관련 국정과제는 총 49개이며 일부 과제(국정50<sup>국토부·행복청</sup>, 국정74<sup>법무부·경찰청</sup>)는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

○ **(정책대상별 분포)** AI 관련 국정과제 총 49개 중 대정부 정책이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정책과 대시장 정책은 각각 34개로 검토됨(중복 분류 포함, <표 2> 참조)

- **(대정부 AI 관련 국정과제)** AI 기반 감사 분야 확대, 사법체계 개혁 및 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공직 내 AI 인재 육성,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및 공공서비스 혁신,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기본법 등 법제 정비, 국방 AI 적용 및 스마트 군체계 구축 등 정부 시스템 혁신 및 인프라 관리가 주요 내용임

- (대국민 AI 관련 국정과제) AI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AI 국민권익플랫폼 및 맞춤형 규제정보 서비스 제공, AI 오남용 대응 및 딥페이크 탐지 등 국민 안전 강화, AI·디지털 역량 강화 및 AI 교육 생태계 구축,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국민의 생활 편의, 안전, 권익 보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대시장 AI 관련 국정과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센터 육성,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초격차 기술 확보, AI 팩토리 등 산업 AI 전환 및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및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AI 기반 전력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 제로화 및 사후 책임 강화가 주요 내용임

〈표 2〉 새 정부 국정계획 내 AI 관련 국정과제의 정책대상별 분포 현황

정책 대상	AI 관련 국정과제 수*	국정과제 번호**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대정부 정책	47개	5, 6, 13, 16,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43, 44, 45, 46, 47, 50, 61, 68, 69, 70, 72, 73, 74, 76, 77, 89, 91, 92, 98, 99, 103, 108, 109, 111,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감사 체계, 공무원 인사 체계 혁신, 공공 AI 공통기반 마련, 국방 운용체계 고도화 등 정부 내부의 행정 효율성과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춤</li> </ul>
대국민 정책	34개	6, 16, 19, 20, 21, 23, 24, 25, 31, 38, 43, 44, 47, 50, 61, 68, 69, 70, 72, 73, 74, 76, 77, 89, 91, 92, 98, 99, 103, 108, 109, 111,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AI 기반 재난 모니터링,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 안전, 생활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계됨</li> </ul>
대시장 정책	34개	19, 20, 21, 22,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8, 43, 44, 45, 46, 47, 50, 61, 68, 69, 70, 91, 92, 98, 103, 107, 108, 113,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고도화 등 산업 생태계, 기업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li> </ul>

\* AI 관련 국정과제 수는 총 49개임

\*\* 개별 국정과제는 내용에 따라 복수의 정책대상에 중복 분류될 수 있음(별첨 참조)

### 3. 소비자정책 영역별 AI 관련 국정과제

- (AI 관련 소비자정책) 새 정부 국정계획에 포함된 총 49개의 AI 관련 국정과제 중 국민(소비자)의 안전, 거래, 정보·역량, 피해구제 등 소비자권의 증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대국민 정책은 총 34개로 분류됨
- (소비자정책 영역별 분포) AI 관련 대국민 정책은 소비자정보·역량(25개), 소비자안전(21개) 영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소비자거래(8개) 및 소비자피해구제(4개)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표 3〉 참조)

#### 3.1. 소비자안전: AI 기반 새로운 위험요인 제거 및 안심 환경 구축

- 소비자 안전 영역(총 21개 과제)은 AI 기술이 야기하는 딥페이크,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둠
  - 국정계획은 AI를 재난 및 사회적 리스크 등 위험요인을 예측·분석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 침해 및 기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을 강화함
- (AI 기반 안전망) AI 오남용 대응 및 데이터 주권 기반 안전망이 구축됨
  - (딥페이크 및 사이버 대응) AI 오남용 대응,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AI 안전·신뢰 기술 개발 및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가 추진됨(국정23)

〈표 3〉 새 정부 국정계획 내 AI 관련 소비자정책 영역별 현황

정책 영역	AI 관련 국정과제 수*	국정과제 번호**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소비자 안전	21개	19, 20, 23, 24, 25, 31, 38, 43, 44, 50, 61, 69, 70, 72, 73, 74, 76, 77, 91, 108, 109,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오남용 대응 및 사이버 보안 강화, AI 융합 제로리스크 사회 구축 (재난/금융 리스크 예측), AI 기반 재난 모니터링·안전신문고 도입,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스마트 돌봄 확충,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및 잊힐 권리 확대, AI 기반 해양감시 및 국방체계 고도화 등</li> </ul>
소비자 거래	8개	19, 21, 31, 38, 47, 61, 68,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 AI 기반 전력망 관리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AI 전환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AI 팩토리, 의료·법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 AI 기반 관광서비스 혁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노력 등</li> </ul>
소비자 정보·역량	25개	6, 16, 19, 20, 21, 23, 24, 25, 31, 38, 43, 44, 45, 47, 61, 69, 70, 77, 89, 92, 98, 99, 103, 108,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및 맞춤형 규제정보 서비스 제공, AI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혁신, 전 국민 AI 교육 생태계 구축 및 AI·디지털 역량 강화 (AI디지털배움터, AI 디지털교과서), AI 기반 직업훈련 확산, 환경영향평가 제도 AI 도입 및 정보 투명성 강화 등</li> </ul>
소비자 피해 구제	4개	6, 25, 103,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및 취약계층 법률지원 확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 강화 및 피해규모별 과징금 도입, AI 기반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시스템 고도화 및 지원체계 정비,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마련 등</li> </ul>

\* AI 관련 국정과제 수는 총 49개이며, 그중 소비자정책 유관 과제(대국민 AI 관련 국정과제)는 34개임  
 \*\* 개별 국정과제는 내용에 따라 복수의 소비자정책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별첨 참조)

-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국정98)는 디지털 성범죄 등 신유형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임
  - AI 기반 대응 체계는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나 AI 오탐지·과탐지 시 무고한 개인의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투명성 검증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데이터 주권 및 보호)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 대응체계 고도화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확대,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도입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강화됨(국정25)
-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확대는 취약계층 권리보장에 큰 의미가 있으나,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권리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교화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이 요구됨
- (생활 안전 강화) AI를 활용한 재난·민생 안전 관리 체계가 고도화됨
- (위험 예측 및 감시) AI 기반 재난 모니터링, 홍수·침수 예측, AI 안전신문고 도입(국정72, 73) 등 전주기 재난 예방·대응 체계가 강화됨
- 이와 함께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국정77)은 취약계층의 생계·주거·건강 등 기본적 생활 안전 확보에 직접 기여함
- AI 기반 재난 예측의 정밀도 향상은 긍정적이나, 예측 실패·오경보 시 국민 혼란과 신뢰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AI 기반 경보체계의 안정성 검증이 필수적임(국정73)
  - 또한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이 AI 기반 안전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면·오프라인·전화 등 다양한 접근 채널 기반의 안전서비스 또한 지속적 설계·운영이 요구됨(국정72, 77)

### 3.2. 소비자거래: AI 기반 시장감시 강화 및 거래환경 공정성 확보

- 소비자 거래 영역(총 8개 과제)은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거래의 비대칭성과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조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함
  
- (불공정 거래 탐지) AI 기반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고도화를 추진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투명성을 확보(국정47), 이는 투자 소비자의 공정거래 환경 보장과 직결됨
  
- AI 기반 시장감시체계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AI의 오탐지·과탐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시장 및 서비스 전환) AI 기반 전력망 관리시스템 구축 및 AI 수요관리 기술 도입(국정38)은 전력 요금 구조, 전력 서비스 품질 등 소비자의 에너지 거래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AI 기반 전력 관리 확대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요금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이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요금·수요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 지원 체계가 요구됨

### 3.3. 소비자정보·역량: AI 리터러시 강화 및 공공 정보 접근성 혁신

- 소비자 정보·역량 영역(총 25개 과제)은 AI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 AI 리터러시를 확보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을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둠
  - 소비자정책 유관 AI 관련 국정과제 중 AI 교육 및 정보 제공 관련 과제 수가 가장 많아 정부의 사전 예방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음
- (AI 리터러시)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가 추진됨
  - (AI 교육 시스템) 초·중·고부터 대학·성인학습자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AI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국정99) 전 국민의 AI 활용 역량 향상을 도모함
    - AI 교육 확대는 소비자의 정보판단력 및 위험 인지 능력 향상에 기여하나 지역·계층·연령 간 교육 접근성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국정99) 취약계층 대상 기초 AI 교육과 학습지원 장치를 병행하여 디지털 불평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보 접근성) 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국정16) 및 AI 기반 전 국민 규제정보 서비스 제공(국정19)은 국민의 민원 처리 편의성과 맞춤형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AI 기반 민원·정보 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대화형 AI 시스템의 오류·해킹 위험 등으로 인해 소비자권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국정16) 이에 AI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확성과 책임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국정19)

### 3.4. 소비자피해구제: AI 활용 및 제도 선진화를 통한 구제 실효성 제고

- 소비자 피해구제 영역(총 4개 과제)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책임 소재 및 대규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구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둠
- (사법 AI) AI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법률 지원 및 사법 효율성이 증진됨
  - (사법 AI 도입) 인공 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향상되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가 확대됨(국정6)
    - 이는 소비자분쟁해결 경로를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피해구제 영역과 연계됨
    - 사법 AI 도입은 법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분쟁해결 경로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AI가 판례 추천·판단 보조 과정에서 활용하는 학습데이터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판단이 반복될 위험이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은 법률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판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증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워 실질적 권리구제 접근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사법 AI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을 강화하고 인간의 심사와 의의제기 절차를 병행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임
    - 또한 디지털 기반 사법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의 양극화 우려가 있으므로 접근성·역량 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제도적 구제) AI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불법정보 노출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분쟁조정 및 디지털 피해구제 체계의 정비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남
- (개인정보 피해구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평가·인증 강화, 피해 규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은 AI 환경에서 빈번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국정25)
- (디지털·미디어 피해구제) AI 기반 불법정보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지원체계 개편(국정108)은 딥페이크, 불법콘텐츠 노출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구제 장치로,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과 회복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에 해당함
  - AI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침해, 불법정보 노출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 유형이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어 사후적·사법적 구제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AI 기반 탐지·차단 기술이 고도화되더라도 오탐지·미탐지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구제 절차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피해 원인 규명 체계 정비, 플랫폼·사업자 책임 기준 강화가 요구됨
  - 또한 디지털 기반 절차가 확대되면서 고령층·취약계층의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와 이용자 접근성 보완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4. 결론 및 시사점

### 4.1. AX시대 소비자정책 동향 종합 검토 결과

- 본 고는 AX시대 소비자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AI 관련 국정과제를 소비자정책 관점에서 검토함
- 검토 결과, 123대 국정과제 중 약 40% 수준인 49개 과제에 AI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쳐 AI 전환(AX)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이 가운데 국민 소비자의 안전, 거래, 정보·역량, 피해구제 등 소비자권익과 직결되는 대국민 AI 관련 정책은 34개로 분류됨
- 소비자정책 영역별로는 소비자정보·역량(25개)과 소비자안전(21개) 관련 AI 국정과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소비자거래(8개) 및 소비자피해구제(4개)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4.2. 소비자정책 영역별 정책 과제

#### 4.2.1. 소비자안전: 제로리스크가 아닌 허용 가능한 위험 관리 관점의 정교한 안전정책 필요

- 딥페이크, 사이버 위협, AI 기반 재난예측, 의료·모빌리티·홈IoT 등에서 AI는 안전을 강화하는 도구인 동시에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 국정계획은 AI 오남용 대응, 딥페이크 탐지, AI 기반 재난모니터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망을 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소비자안전 정책은 ‘위험 제로’ 선언이 아닌, 위험을 투명하게 관리·설명하고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탐지·차단, 재난 예측, 의료AI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험요소가 있는 분야에서 AI 활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 체계, 알고리즘 감사, 성능·한계 정보 공개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장애인·디지털 취약계층이 AI 기반 안전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면·전화·오프라인 채널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유지·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AI 안전정책은 기술 고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험 정보 공개·설명, 책임주체 명확화, 취약계층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를 함께 추진해야 함

#### 4.2.2. 소비자거래: 알고리즘 기반 거래질서에 대한 공정성 규범 정립 필요

- 국정계획은 이상거래 탐지, AI 기반 시장감시, 에너지·금융 분야의 AI 도입 등을 통해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함
- AX시대 소비자거래는 추천·검색·가격결정 등 핵심 거래 기능을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AI를 활용한 거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에 대한 규범을 조기에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감독 인프라를 강화해야 함

○ AI 활용에 따른 가격·조건 차별의 허용 범위,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의 최소 기준, AI 표시·광고의 진실성 요건 등 공정거래 규범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유통·플랫폼 분야에서 알고리즘 심사·감독체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제재 원칙, 소비자단체·전문가와의 협력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4.2.3. 소비자정보·역량: AI 리터러시 제고 및 비교·평가 정보 확대 필요

□ 국정계획은 AI 교육 생태계 조성, 디지털 역량 강화, AI 기반 국민권익·규제 정보 서비스 구축 등 정보·역량 영역에 가장 많은 정책 자원을 배분하고 있음

□ 향후 정책 방향은 단순한 디지털 교육 확대를 넘어 AI 작동 원리·한계·위험을 이해하는 비판적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세대·지역·계층 간 역량 격차 축소, AI 서비스 간 성능·안전·공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고령층·저소득층·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기초 수준의 AI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AI 의료, AI 금융, 추천 알고리즘, 생성형 AI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성능·안전성·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공개 지표·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AI 기본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용 역량을 넘어선 비판적 AI 이해 능력과 객관적 비교정보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함

#### 4.2.4. 소비자피해구제: 디지털·AI 환경에 적합한 통합형 피해구제 체계 설계 필요

- 사법 AI 도입, 개인정보 유출 대응체계 강화, AI 기반 불법정보 탐지·차단 및 이용자 지원체계 개편 등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분쟁 해결·피해구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서비스는 피해 규모·속도가 크고, 책임 구조가 복잡하며, 증거 보존·원인 규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피해구제 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온라인·모바일 기반 원스톱 분쟁조정·피해구제 창구, 플랫폼·AI 사업자를 포괄하는 책임 규율 체계, 집단분쟁조정·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규모 피해 대응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법 AI 및 온라인분쟁해결(ODR) 시스템 도입 시 AI 판단에 대한 이의제기·재검토 절차,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상담 지원 채널을 함께 설계해야 함
- AI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온라인 기반 통합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AI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소비자피해구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4.3. 추진체계 및 후속 과제

- AX시대 소비자정책은 단일 부처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국정계획 상 다수의 AI 관련 과제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 영역 간 중복·공백·충돌을 점검하는 기능 및 체계가 요구됨
- AI 기본사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지표,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소비자역량지수 등 한국소비자원이 생산하는 소비자정책지표를 활용·연계·고도화하여 AI 관련 소비자 체감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
  - 특히 부처별 정책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표 분석 결과를 제공·활용함으로써 각 부처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소비자 관점에서의 위험요인·사각지대·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AI 기본사회는 기술·산업 정책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과 제도가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AI 관련 국가전략과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권의 증진과 격차 완화를 중심에 둔 정책 설계·평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별첨> 새 정부 국정계획 내 AI 관련 정책 및 소비자정책 유관 국정과제 총괄표**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1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정부) 감사 운영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를 확대하여 공직 생산성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함. 이는 감사 체계 및 공직 업무 혁신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정책 영역과는 직접 연계성이 낮음.</li> </ul>
2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	국민, 정부	정보·역량,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정부) 인공지능 기반 사법 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법률 정보 접근성 향상) 및 피해구제(분쟁해결 경로 확장) 측면에서 국민 권익 강화에 기여함.</li> </ul>
3	13	충직·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정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능력 중심의 인사체계를 강화하여 유능하고 생산적인 행정 환경을 구축함. 이는 공직 내부의 행정 혁신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정책 영역과의 직접 연계성은 낮음.</li> </ul>
4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	국민, 정부	정보·역량,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정부) 민원·제안 신청 편의를 높이는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화형 AI를 통한 맞춤형 신청서 작성을 지원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 및 피해구제(고충 해결 및 구제 기능 강화)에 기여함.</li> </ul>
5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거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AI 기반 전 국민 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창업·영업 등 국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규제 정비를 추진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규제 정보 접근성 향상), 거래(공정 거래 환경 조성), 안전(생활 안전 규제 개선)과 연계됨.</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6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기 정통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AI기본법 시행령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안전(AI 이용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을 위한 기반 정책임.</li> </ul>
7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기 정통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 독자 AI 모델 개발 및 전 국민 AI 접근성·학습 기반 강화 (AI 디지털 배움터), 산업 전반의 AI 전환 (AI팩토리)을 촉진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활용 능력 제고)과 거래(서비스 품질·접근성 향상) 개선에 연결됨.</li> </ul>
8	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과기 정통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NPU·PIM 등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및 범용인공지능 등 초격차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함. 이는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 중심 정책으로 소비자 정책 영역과는 직접적 연계가 낮음.</li> </ul>
9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 사회' 실현	과기 정통부	국민, 정부	안전,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정부) 금융·재난 등 주요 위험요인을 AI로 예측분석하고, 딥페이크 탐지 및 AI 안전·신뢰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이 AI를 신뢰할 환경을 조성함. 이는 소비자 안전(생명·재산 정보 보호) 및 정보·역량(안전한 AI 활용 정보 제공)에 직접 기여함.</li> </ul>
10	24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행안부	국민, 정부	정보·역량,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정부) 민원처리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이용 역량 강화) 및 안전(공공 AI 신뢰기반 구축) 증진에 기여함.</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11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 정보위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 개인정보 유출 불법유통 대응을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도입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강화함. 이는 소비자 안전(정보 안전성 제고), 정보·역량(정보 이해·활용 역량 강화), 피해구제(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영역에 해당함.</li> </ul>
12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기 정통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청년 연구자 지원 등 R&amp;D 수행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학술 중심 정책임. 소비자의 안전·거래·정보·피해구제와 직접 연계되지 않아 소비자정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li> </ul>
13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NEXT) 전략기술 육성	과기 정통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기술을 민관 협업 방식으로 확보하고 기술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을 촉진함. 이는 기술산업 혁신 중심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적 연계성이 낮음.</li> </ul>
14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산업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AI팩토리, 휴머노이드, 바이오·컬처 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산업혁신 패키지 정책임.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li> </ul>
15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산업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제조업 중심 정책임.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li> </ul>
16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국토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상용화하고 AI 기반 도시서비스를 실증·확산함. 소비자 안전(모빌리티 안전성, 사고 예방), 거래(서비스 품질, 요금체계), 정보·역량(AI 도시서비스 정보 접근성)과 연계됨.</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17	32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복지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의료AI 기술 개발·실증 및 의료현장 적용 연계 R&amp;D 투자, 의료데이터 상호연계 기반 마련 등 산업·정부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 연관성은 제한적임.</li> </ul>
18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재경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AI 기반 교통·물류·안전·헬스케어 등 핵심 서비스의 생산성·품질을 높여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 이는 산업 정책 중심이므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적 연계성이 낮음.</li> </ul>
19	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중기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AI 등 님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육성하고 투자·기술 거래를 지원함. 기업정책 중심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li> </ul>
20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AI R&amp;D 및 인력양성을 지원함. 산업 정책 중심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 연계가 낮음.</li> </ul>
21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조실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시장/대정부) AI·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에 '규제 제로 구역'을 설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등 사후 책임 장치를 강화함. 규제환경 변화 정책으로 소비자정책 영역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li> </ul>
22	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산업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전력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AI 수요관리 기술 도입·에너지 데이터 공개를 통해 전력효율을 높임.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정보 투명성 제공) 및 거래(요금 구조 및 서비스 품질 영향)와 관련됨.</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23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기후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감염병 감시,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인프라 구축 등 국가·지역·사회 전반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임. 이는 소비자 안전(간강·생명 보호) 및 정보·역량(기후위험 영향 정보 제공)과 연계됨.</li> </ul>
24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기후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식중독 예측 시스템 등 생활환경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 확대를 추진함. 이는 소비자 안전(생명·건강 보호) 및 정보·역량(식품 선택 알권리 확보) 영역과 관련됨.</li> </ul>
25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기후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AI·빅데이터를 도입하여 평가 시스템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강화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됨.</li> </ul>
26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국민 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금융위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시장/대정부) AI·전략산업·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함. 이는 산업·금융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li> </ul>
27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금융위	국민, 시장, 정부	거래,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이상 거래 탐지 고도화 및 불법이익 환수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제고함. 이는 소비자 거래(공정거래 환경 보장) 및 정보·역량(금융정보 접근성 향상)과 연결됨.</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28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토부, 행복청	국민, 시장,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세종 내 AI·모빌리티·바이오 혁신허브 조성, 교통망 확충,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추진함. 정주여건 개선 과정에서의 생활·교통 안전, 기반 시설 안정성 등 소비자 안전과 연계됨.</li> </ul>
29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중기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지역 상권 정보 접근성 개선)과 거래(지역 상권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영향을 미침.</li> </ul>
30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	국민, 시장, 정부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로봇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식품 가격·품질 안정성을 확보함. 이는 소비자 거래(가격·품질 선택 가능성 안정화)와 연계됨.</li> </ul>
31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식품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재해 위험 지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를 도입 하고 식량 공급 안정성을 강화함. 이는 소비자 안전(식품 공급 안정성 유지) 및 정보·역량(재해위험 정보 제공)에 기여함.</li> </ul>
32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 모델 확산 등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강화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 역량 개선)과 연결됨.</li> </ul>
33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행안부	국민,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AI 안전신문고 도입, 주민참여 안전점검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안전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함. 이는 소비자 안전(생활안전 리스크 직접 감소) 영역과 직접 연계됨.</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34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행안부	국민,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AI 기반 재난 모니터링, 홍수 침수 예측, AI기반 119시스템 등 전 주기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함. 이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안전 영역에 해당함.</li> </ul>
35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법무부, 경찰청	국민,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치안 AI 도입, 신종 범죄(딥페이크·기술범죄) 대응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치안 역량을 강화함. 이는 국민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 영역임.</li> </ul>
36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수부	국민,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AI 기반 해양감시 체계(MDA), 해양사고 재난관리 등을 통해 해양안보·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함. 이는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안전과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영역에 해당함.</li> </ul>
37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복지부	국민, 정부	안전,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복지멤버십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취약계층의 지원 접근성을 높임. 이는 소비자 안전(기본적 생활 안전 확보) 및 정보·역량(정보 접근성 및 서비스 선택 역량 보완)에 기여함.</li> </ul>
38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조실 등	국민, 정부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청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확대, AI 기반 직업훈련 확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디지털 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li> </ul>
39	91	인구가족 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복지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 서비스 확충을 통해 고령층 안전·건강 관리와 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이는 고령층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영역임.</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40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노동부	국민, 시장, 정부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빅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AI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체계를 마련함. 이는 소비자 정보·역량(노동 시장 정보 접근성 및 역량 강화)에 해당함.</li> </ul>
41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성평등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유형 폭력에 대응함. 이는 소비자 안전(온라인 환경 안전 확보) 및 정보·역량(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대응 안내)과 연결됨.</li> </ul>
42	9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부	국민, 정부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초·중·고부터 대학·성인학습자까지 생애주기 기반의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를 추진함. 이는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정보판단 역량을 강화하는 소비자 정보·역량 영역임.</li> </ul>
43	103	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 산업화 추진	문체부	국민, 시장, 정부	안전, 거래,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제작 지원·데이터 구축·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함. 이는 소비자 안전(불법 콘텐츠 차단), 거래(플랫폼 품질), 정보·역량(저작권·이용 규범 이해)과 연계됨.</li> </ul>
44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문체부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시장/대정부) K-컬처·지역특화 자원 활용, AI 기반 관광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임. 서비스 혁신은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지만, 정책의 핵심은 산업 육성에 있어 소비자정책 영역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낮음.</li> </ul>

연 번	국정 과제번호	국정 과제명	주관 부처	정책 대상	소비자정책 영역	AI 관련 주요 정책 내용
45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미통위	국민, 시장, 정부	안전, 정보·역량,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 기반 콘텐츠 관리 체계(불법정보 탐지·차단),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 유산 승계제도 마련 등을 포함함. 이는 소비자 안전(유해정보 차단), 정보·역량(정보 건전성 제고), 피해구제(피해 지원 체계 정비)와 긴밀히 관련됨.</li> </ul>
46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방부	국민,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전장·작전·병력관리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방 운용체계를 고도화함. 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는 국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에 해당함.</li> </ul>
47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방부	국민, 정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정부) 병력감축에 대응한 AI·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군체계를 구축하고 전투임무에 집중하도록 함. 국가안보 역량 강화는 국민 안전 확보와 직결되어 소비자 안전영역에 해당함.</li> </ul>
48	113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방사청	시장, 정부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시장/대정부)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방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획득 체계를 혁신함. 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 중심 정책으로 소비자정책 영역과는 연계성이 낮음.</li> </ul>
49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국민, 시장, 정부	거래, 정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대시장/대정부) AI·디지털·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을 중심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규범 형성에 참여함. 이는 소비자 거래(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로 가격·품질 안정화) 및 정보·역량(대외경제 리스크 정보 공개)과 관련됨.</li> </ul>

## [ 참고 문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12.30.). 인공지능 대전환(AI Transformation)을 주도할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발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9.8.).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025.9.).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 국정기획위원회(2025).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 김덕형, 박형준(2015). 한국 관료의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 고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1), 165-187.
- 여정성, 신세라, 사지연(2020). 소비자정책: 이론과 정책설계. 서울: 교문사.
- Quade, E. S.(1982). Analysis for Public Decision 2nd ed. New York: Elsevier.
- Schneider, A., & Ingram, H.(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